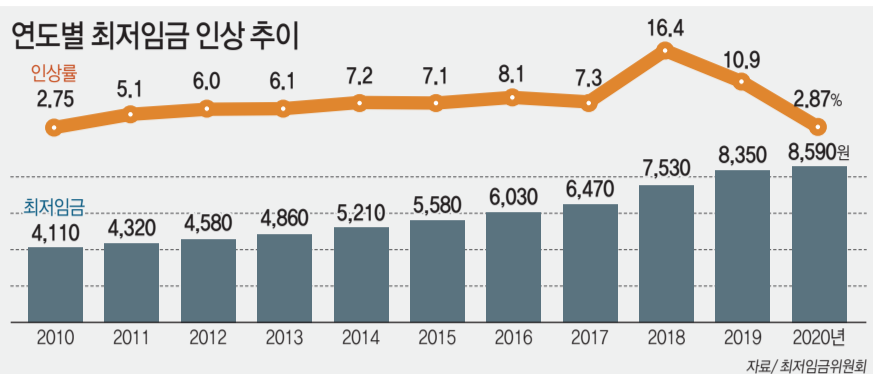


사용자도 노조도 승복 못하는 최저임금... 사회갈등 뇌관으로

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삭감' 주장 사용자측도 아쉬워
 문대통령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규모별 차등화 등 제도개선 '협로'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승자는 없었다.

'취임 3년내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근로자위원중 한 쪽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추천위원 4명이 전원 사퇴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한다고 최근 2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를 당초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측 손을 들어주며 올해보다 2.87% 인상된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소폭 인상되면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이 수정 제시한 859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자 노동계로부터 '전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이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면서 "이같은 결론은

어떤 근거도 없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임금위는 또다시 뼈격거리게 됐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

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 "1만원 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사용자측인 소상공인, 기업들도 앞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못마땅하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업종, 지역 조식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측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영세업종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 자격 및 선출방식 개선 등 결정구조 개편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가 앞서 결정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이 사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셈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0년만에 돌아온 키코... 은행권 "잘못 배상 댄 배임"

금감원, 내달 분조위에 안건 상정 기업 "합리적인 보상비율 나와야" 은행 "배상방안 나눌 수 있어 촉각"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오는 8월 10년간 논란이 됐던 키코 사태가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에는 법정 아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다. 금감원은 내달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들의 자료와 면담을 바탕으로 분조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은행과 피해기업의 희비가 갈릴 수 있어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될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이나 16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윤석현 금감원장이 키코 재조사를 추진한 지 1년 만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추가의견을 듣는 등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는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키코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한 피해 실태에 따르면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법원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부 사건에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

유로 은행 쪽에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피해 기업 "불완전 판매 가능성 충분... 배상비율 늘려야"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법원 판례를 통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율변동이나 콜옵션 풋옵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 셈이다.

피해기업들도 키코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동의한다. 이성민 엠텍비전(피해기업) 대표는 "환헤지상품은 통상 수출 기업이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키코는 반대로 은행이 기업에게 환리스크를 떠넘기는 식으로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키코는 부분환헤지라는 이름으로 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정 구간(보통 20~40원구간)만 보호를 받고 그보다 환율차가 커지면 기업이 2배로 보상하거나 기준이상을 넘어서면 계약해지를 당해야 했다"며 "이런 위험

한 상품에 이해하고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키코 상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사태로 인해 대다수 수출 중소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회생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며 "무조건 100% 보상을 요구할 순 없지만, 피해기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비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배상비율에 따라 대응 달라질 것"

그러나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과 손해배상 시도도 지났지만, 결과만을 두고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고, 4개 기업에 피해보상이 또 다른 판례로 작용해 키코 기업에 대한 배상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피해보상만 하기엔 미치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라며 "결국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불완전판매를 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해당은행이 손실의 20~30%를 배상하는 권고안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키코 불완전 판매에 대한 23건의 판결의 배상비율 평균이 20~30%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는 전체 피해금액을 두고 20~30%를 배상하는 방안과 은행별로 배상비율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배상금액에 따라 은행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정부도 내린 성장률... 한은은 얼마나

정부 0.2%p 내려... 비슷하게 낮출 듯

수출, 투자, 소비 등 국내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0.2%포인트 내린 만큼 한국은행도 2.3%~2.4%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8일 올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만약 이번엔 한은이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다면 2년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전망치 2.5%에서 2.4%, 더 내리면 2.3%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출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을 펼치던 정부는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단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소재·부품산업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당초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보복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2.4~2.5%로 낮춘 바 있다.

외국계 기관들은 속속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amp;퍼츠(S&P)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낮췄다. S&P는 지난 4월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4%로 내린 이후 또 하향 조정했다.

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한·일 간 무역이슈가 국내의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췄다. 내년 전망치는 1.7%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시티(Citi)와 골드만삭스(GS)는 2.1%로 JP모건은 2.2%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노무라(1.8%), ING 그룹(1.5%) 등은 1%대를 전망했다.

안소는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안팎의 무역갈등으로 국내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확대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수 있겠지만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새로운 리스크도 발생한 만큼 지난 4월처럼 한은의 낙관 편향적 시각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9@